

환경보전 등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 개념으로 친환경농업 직불금 제도가 개편되어야 한다.

박종권(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장)

1. 친환경농업 직불금 도입 배경

- 정부는 소비자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, 생산자의 소득을 증대시키며,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1997년 친환경농업육성법을 제정하고 1999년 친환경농업 직불제도를 도입함.
- 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적게 사용하여 안전한 농산물 공급과 환경보전에 기여
-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일정기간동안 일반관행농업 대비 소득 감소분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자 도입

* 친환경농업 직불금 현황(ha당, 연간)

유기농 : 밭 120만원, 논 60만원, 지급기간 5년

무농약 : 밭 100만원, 논 40만원, 지급기간 3년

2. 친환경농업 직불제의 문제점

- 현행 친환경농업 직불제는 소득 감소분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한시적인 지급으로 인해 실효성이 낮으며, 낮은 금액으로 인해 소득 감소에 대한 기여도도 낮은 상황임.
- 일반관행농업 대비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소득감소 등의 이유로 인해 최근 친환경농업 실천농가가 급감하고 있음.

[친환경농업 현황]

- 실천농가 : '12년 143,083호 → '14년 6월 109,372호(△23.6)

→ '14년 12월말 9만호내외

- 실천면적 : '12년 164,289ha → '14년 6월 121,304ha(△26.2)

→ '14년 12월말 10만ha내외

- 친환경농업 직불금의 경우 2013년 농가당 542천원이 지급되었으며, 이는 농가소득의 1.6%에 불과함.
- 친환경농업의 환경보전 등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 미비
 - 금년부터 친환경농업의 환경 보전 등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유기농의 경우 ha당 쌀 60만원, 논 30만원을 3년간 지급기로 하였으나, 낮은 보상금액과 3년이라는 한정된 기간으로 인해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.
- 품목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동일한 지급 단가로 인해 과수농가의 친환경농업 포기 사례 속출
 - 과수류의 경우 현재 저농약 재배 비중이 70%이상으로 2015년 저농약 인증제가 폐지 되면 과수의 무농약, 유기 인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 방안이 절대 필요함.

3. 친환경농업 직불금의 개선방안

-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서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대한 지속 직불이 필요함
 - 소득보전 차원을 넘어 친환경농업이 가지는 환경보전에 대한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직불금의 영구 지급 필요
 - 농업의 다원적·공익적 기능에 보상이라는 전사회적 공감대 형성 필요
-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직불금 단가의 대폭적인 인상 필요
 - 현행 지급단가로는 친환경농업을 지속하도록 하는 유인책이 될 수 없음(농가소득의 1.6%, 타직불금 포함시 2.8%). 소득감소분과 공익적 기능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와 농가소득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외국의 직불금 사례(일본 13.9%, 스위스 61.6%, 유럽연합 32.2% 등)를 참조하여 지급단가의 대폭적인 상향 필요
- 품목별 지급단가 차별화를 통해 친환경 과수농가의 육성 필요
 - 현행 논, 밭으로 구분되어 있는 직불단가에서 품목별 소득, 생산비등을 고려하여 논, 밭, 과수로 구분하고, 지급단가 차별화를 통해 친환경 과수농가를 적극 육성하여야 함.

4. 기타 제언

○ 농자재 중심의 간접지원 방식에서 직접지원 방식으로의 전환 필요

-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농업 지원정책이 농자재 중심으로 추진됨으로써 생태 순환적 관점에서의 농업이 아닌 고비용·고투입 방식의 농업이 지속되고 있음.
- 농자재 지원중심에서 직접지불 방식으로 농업 지원 정책을 과감히 전환하여 농가에서 농지 환경에 적합한 농자재를 선택하여 사용토록 하며, 나아가 농자재의 자가 제조 활성화를 통해 고비용 구조에서 저비용 구조로 전환, 생산비를 낮출 수 있도록 유도 하여야 함.

○ 농민기본소득 보장 제도 도입

- 농업은 식량을 생산하는 일차산업적인 기능만이 아니라 환경생태계를 보전하고, 문화와 전통을 보전하며, 지역사회 공동체를 형성하며, 식품의 안전성과 국민 생존권을 보장하는 다원적 공익기능(Multi-functionality)을 수행하는 국가 기본 산업이라는 전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농민기본소득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.
- 농민기본소득 정책은 도시와 농촌의 불균형을 극복하고, 농촌 활성화와 후계인력 양성,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구현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며, 핵심적인 정책이 될 것임.

참고문헌

김성훈(2015). 2015년 농업·농촌을 말하다. 대산농촌문화재단

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(2014).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정책 자료집

정학균외(2014).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한 직불제 개편방향. 농촌경제연구원